

‘스쿨존 사망’ 현장검증... “음주운전자, 왜 집까지 갔나” 쟁점

피고인 “방지턱 오인...도주 의사 없어” 현장 살핀 재판부 “턱 크게 높지 않아” 검찰 “즉시 정차 필요...정차 가능했다”

술에 취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사건에 대해 법원이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사고 당시 아이를 과속방지턱으로 착각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가 직접 현장을 찾으면서, 과연 그에게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향후 재판부 판단의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 사건의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오전 10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시작된 검증 절차는 사고 직후 A씨의 행적과 도주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B(9)군을 차로 치었지만 집까지 약 930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아이를 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후 시차를

두고 사고 현장에 다시 나타났는데, 이를 두고 A씨 측은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했던 당시 A씨가 차량으로 이동했던 동선을 쫓으며 검증을 진행했다. 집에 도착하기 전 A씨가 한 차례 이상을 감지하고 차량을 멈췄던 지점도 살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방지턱으로 오인했다는 지점에 멈춰서는 실무자들에게 “이 부분을 자세히 찍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배수로의 높이가 아이를 방지턱 내지는 배수로로 오인할 정도의 높이인지를 본 것”이라며 “충격 위치는 배수로 1m 정도 앞이었는데 크게 턱이 있는 높이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실에 대해서는 다름이 없지만 규범적으로 도주로 평가

할 수 있는지 봐야한다”며 “주차한 곳이 멀지 않았으니 여러 우연이 상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과 A씨 측 변호인 역시 각각의 주장을 펼쳤다. 검사는 “법적으로 즉시 정차해야 하는 상황이고,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곳에 충분히 차를 세울 수 있었다”며 “굳이 집까지 차를 끌고 가지 않고 사고를 인식했다면 내렸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차를 멈출 수는 있었다. 생각보다 (사고 인근) 턱이 낮지만 피고인 본인은 무언가를 밟고 사람이란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했다. A씨는 이날 검증 현장에는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4시5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초등학교 후문

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집 주차장에서부터 약 930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했고,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좌회전하던 중 B군을 충격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B군을 충격한 순간 차량이 흔들리고, A씨가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차량을 몰아 B군이 쓰러진 채 방치됐던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이슬기자



‘반 고호 자화상 이견 찍어야 돼’ 24일 대구 동구 아양아트센터 아양갤러리에서 열린 ‘고호, 향기를 만나다’ 전시회를 찾은 한 시민이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경찰,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200일

특별단속으로 785건 적발...1727명 검거, 25명 구속

공직자 금품수수, 재정 비리 등 부패범죄 사범 170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00일간 ▲금품수수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부정 알선·청탁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85건을 적발해 1727명을 검거하고 이중 2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부패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을 살펴보면 재정 비리 사범이 997명(57.7%·5명 구속)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권한 남용 361명(20.9%·3명 구속) ▲금품수수 268명(15.5%·13명 구속) ▲부정 알선·청탁 101명(5.8%·4명 구속)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정 비리 사범 중에서도 보조금 편취·횡령 등의 보조금 비리 사범이 85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부당개입·지시(103명), 공직자 등 금품수수(100명), 문서 위변조·공무 방해(98명) 순이었다. 지난해 11월에는 10% 할인된 금액에 대량으로 구매한 지역사랑 상품권을 가족·지인 명의의 허위 가맹점 수십 곳을 통해 불법 환전, 2억원 상당의 차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3명이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강원 고성군과 경남 거제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판매 기간 중 20억원 상당을 법인 명의로 대량 구매한

후 허위 가맹점 28곳을 통해 부당 환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가맹점들은 가족과 지인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한 남용 범죄 중에선 부당개입 지시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문서 위·변조 공무 방해(98명), 직무 유기(32명), 직무 비밀 이용(22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금품수수 사범 중에서는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100명), 불법 정치자금 수수(31명), 공직자 등 이외 금품수수(23명), 청탁금지법 위반(15명) 순서로 많았다. 부정 알선·청탁 중에서는 알선 명목 금품수수 40명, 부정 청탁 12명 등이 붙잡혔다. 검거된 공직자 총 355명 중 국가·지방공무원이 305명(7명 구속)으로 85.4%를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로 분류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이 276명이었다. 정치인·고위직 등의 사회적 지위·권력 관계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 전 지자체장 4명, 지방의원 15명, 4급 이상 공무원 29명 등도 검거 인원에 포함됐다. 경찰청은 “보조금 비리 상시 단속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법령 제·개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대낮 금은방서 귀금속 훔친 여중생 2명 사흘 만에 검거

대낮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10대 소녀 두 명이 범행 사흘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금은방을 털 혐의(절도)로 중학교 3학년 A(14)·B(15)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일 낮 12시5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금은방에서 공범 C(13)군과 함께 금

팔찌 등 1800여 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C군은 인근 상가 건물에 숨었다가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붙잡혔지만 A·B양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났다. 이들은 금은방에서 손님 행세를 하며 둘러보다 주인의 시선을 피해 귀금속을 챙겨 달아

났다. 경찰은 탐문 조사 끝에 지난 23일 오후 5시 30분께 치평동 한 카페에 함께 있던 A·B양을 검거했다. 이들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훔친 장물을 내다 판 것으로 알려졌다. A·B양은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오유나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